

社說

천년숨결 부활시킨 '전남마을이야기 박람회'

전남도가 올해 처음 개최한 '전남 마을이야기 박람회'가 알찬 프로그램과 수많은 관광객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19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마을마다 깃든 천년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이야기형식으로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공동체의 전행이자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며 역사의 시작점으로서 마을의 역사와 철학, 생태, 공동체 정신, 다양한 문화자산 등 오랜 세월 묵혀둔 마을의 숨결을 부활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가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됐다.

박람회에 참여한 22개 마을은 시·군의 추천과 치열한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전남도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향토적인 색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 이들 마을의 독특한 자원을 개발 상품화해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제관에서는 인물 따라 시간여행 마을, 놀라운 자연생태를 담은 마을, 옛 이야기를 품은 걷기 좋은 마을, 이색 체험으로 가득한 마을, 풍류 가득한 마을 등 5개 분야로 나눠 마을별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홍보관에서는 시·군의 대표 관광문화자원, 농특산물 등을 전시·판매하고, 산업관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특산물을 생산하는 마을기업이 각자의 상품을 알리는 전통장터 마당이 되었다.

특히 최대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축제거리 열려 참가자들이 고향의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전라도 땅에는 천년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다. 선사시대 유적부터 천년고찰, 누정문화, 동학혁명, 항일의병 전적지, 근대역사유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조상들의 숨결과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번 첫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재조명하는 한편, 공동체라는 따뜻한 가치가 더 확산되고 미래 발전으로 이어질길 기대한다.

또 지역감정 헤집는 한국당, 소아병 도졌나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에 이어 또 다시 지역감정을 자극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호남에 와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영남에 가면 어김없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계기로 여론이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위선적인 정권을 심판합니다"라며 "정답은 딱 하나,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그 힘은 바로 이곳 부울경 지역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권 들어 부·울·경 지역을 정말 차별하더군요. 서울의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이 중 20명이 광주·전남·전북 출신이다. (그랬다)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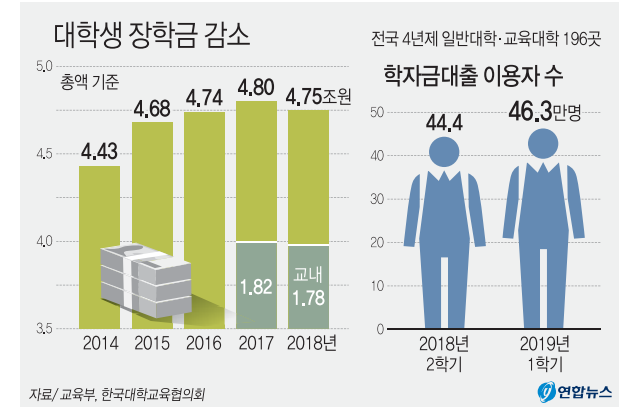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산·경남(PK) 민심을 일찌감치 불태워 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자 법률가인 나 원내대표가 벌여낸 말치고는 논리에 맞지도 않고 품격이 낮은 소아병적인 발언이다. 주민들의 신성한 선택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호남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어 장관도 대구 출신을 임명한 바 있다. 호남이 최대 농도이지만 농식품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52명 중 영남 출신이 전체의 42%인 22명에 달하고 있다. 호남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전체 가구 중 농업 종사자 비율(16.2%)도 가장 높은 대표적인 농도이다. 이 점에서 경제부처 중 호남 출신 장관을 많이 배출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18개 부처 장관 중 영남 출신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 장관·차관마저 영남 출신이 싸늘하고 있어 오히려 '호남홀대'가 우려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호남홀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그래픽 뉴스

대학생 장학금은 줄고 학자금 대출은 늘어...46만명 빛 안아



4년제 대학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줄어든 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2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 전국 417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장학금·적립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이 중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의 정보를 분석해 발표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일반대학·교육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4조7천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12억원) 감소했다. 장학금의 59.1%(2조8천729억원)는 국가장학금·국비장학금·보훈장학금 등 국가 재원에서 나왔다. 이어 학교 자체 재원으로 이뤄진 교내 장학금 37.4%(1조3천754억원), 기업체·민간단체·개인 기부자 등이 지급하는 사설·기타 장학금 3.0%(1천443억원),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이 0.5%(208억원) 순이었다.

장학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특히 교내 장학금이 2017년 1조8천214억원에서 1년 사이 2.7% 줄어 학생들이 자체 장학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원 장학금도 2017년 2조8천152억원에서 0.3% 줄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사설·기타 장학금과 지자체 장학금은 2017년 대비 각각 3.5%·2.4% 늘어났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3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원)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0.7% 감소)보다 비수도권 대학(1.5% 감소)에서 감소 폭이 더 컸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학금 폐지에 따른 감소분 541억원을 반영하면 장학금 총액이 4조8천1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억원 늘어난 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입학금 폐지로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기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시일야방성대곡’

하는데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에 있다. 역사교육의 강화다. 준동하는 친일을 경계로 삼고 '제2의 이순신' 같은 지도자를 내야 하는 이유에서다.

경술국치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했다. 물론 조기를 계양했다. 사회관계망(페이스북)을 통한 관련 댓글 달기, 기억하기 이미지 제작 게시에도 나섰다. 전문가 그룹으로 T/F를 구성해 학교 내 친일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청산작업까지 속도가 붙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함으로써 미래의 올바른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다. '웨렌 버트,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서 역사에도 조예가 깊은 짐 로저스는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로 넘어오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눈부시게 발전할 행복한 나라'라고 예측했다. 일본은 2050년 안에 망하거나 최악의 범죄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방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승리의 역사만 있을 것이다. 국론을 모아서 일본에 휘둘리지 않는,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더욱 굳건한 나라를 만들자. 지금 시대적 소명이 눈앞에 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다. 과거 군국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제는 경제침략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 중이다. 제2의 독립운동이다. '가깝지만 먼 나라'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할 때, 국가개입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군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안 제16조, 제170조, 제172조)한다 명목으로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법령상 의무불이행 시 국가가 직접 시정명령 및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민과 지방의 자율성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전제를 둔다면 국가개입은 가능하

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행수단이 담보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지방상호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를 신설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협력을 의무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별도 법률로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담보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보다는 지방중앙협력회의라고 명칭을 바꾸어

다섯째, 대도시특례제도는 지역

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해준다. 어쩌면 논란의 중심은 딸 문제다.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70%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 참에 '불공정한 게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마땅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거나, 특히 개인감정에 몰입돼선 안된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에 어긋간 것을 놓는 친일 종일세력, 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가 잘못이었다고 말하는 그들의 무한질주는 이제야 멈춰세워야 할 때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흉계를 통렬히 공박해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 한다. 무엇보다 일제 청산이 급하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면서 기록권을 누려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다. 과거 군국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제는 경제침략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 중이다. 제2의 독립운동이다. '가깝지만 먼 나라'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을 준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서 촉발한 이번 사건은 '기해왜란(己亥倭亂)'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427년 전 임진왜란(壬辰倭亂)에 비하면, 이번에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은 것이 다른 점이다.

아니다. 그 때도 꺾이지는 않았었다. 한 시대를 타고난 결출한 영웅 이순신이 있었고, 역사에 남은 불멸의 신화를 만들어 낸 호남인, 분연히 떨쳐 일어난 백성들이 있었다. 세계 해전사의 으뜸으로 꼽히는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퇴한 '13척의 승리'는 또 어떤가.

1910년 8월29일, 일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강제 개항,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이다. 8월22일 이완용과 테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고, 29일 공포됐다. 이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앞서 1905년 11월20일자 황성신문 2면에 실린 시일야방성대곡. 저간악한 이도 히로부미를 힐난하고 을사오적의 우리 강도와 국가를 남에게 바치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매국의 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을사조약은 고종황제가 승인을 거부했으므로 무효라고 했다.

그렇다.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반일과 항일을 넘어 극일로 가는 중대한 시기에 다름없다. 단일대오가 흔들려선 안된다.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국 후보자

편집국에서



김종민 사회부장

'아! 원통하고, 아! 분하다. 우리 이전만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기 이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았구나! 원통하다. 동포, 동포여!'

경술국치(庚戌國恥) 109년이다. 다시 대한민국은 일본의 침략에 마주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지만, 적전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람 앞 촛불인데도 나는 진보, 너는 보수, 두 동강 난 우리다. '내로남불' 정치공학적 구도에 매몰돼 사망선고를 받은 국회, 정말이지 이게 나라나 싶다.

2019년 8월29일 추념식. 아베 정권의 치졸한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술국치 잊지 말고 친일세력 척결하자', '일제(日製)의 사용은 일제(日帝)로의 회귀'... 독립군가를 부르며 만세를 삼창했다. 나는 감히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

자치칼럼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방자치회장

지방자치법! 안녕하십니까?

적인 일이다. 필자는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안녕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법률(안)을 보면 189조로 구성돼 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아 내려다 보니 조항 구성이 많아진 것이다. 지방자치기본법에는 중요한 원칙과 방향을 담아내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구체적인 사안들은 개별 법률에서 깊게 다루고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개별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안)은 주민자치회를 자율적 규약으로 읍·면·동별 해당 행정구역 주민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성, 운영 및 위원선정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먼저 주민 자치회가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적의식이 고양돼야 한다. 자치적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주민들의 자치적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사무에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와 위탁사무에 관한 내용은 주민자치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특권과 특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국가개입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군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안 제16조, 제170조, 제172조)한다 명목으로 시·군·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법령상 의무불이행 시 국가가 직접 시정명령 및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민과 지방의 자율성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전제를 둔다면 국가개입은 가능하

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행수단이 담보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지방상호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를 신설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협력을 의무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별도 법률로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담보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보다는 지방중앙협력회의라고 명칭을 바꾸어

다섯째, 대도시특례제도는 지역

분권보다는 균형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법률(안)에 의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사무, 재정, 조직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고양·용인·창원 시이다. 대도시특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될 여지가 있다. 수도권의 인구는 2천58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인구절벽시대에 군소멸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특례제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특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특례시로 위임되어야지 도의 권한이 특례시로 위임되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31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또한 아쉬운 점도 많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혹시나 국회의원에 의해 더 축소되거나 양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만큼은 국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도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도시특례제도는 지역

독자투고

1인 시위는 무조건 보장인가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1인 시위는 그렇다면 시위에 포함되는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판결(2005고정234)에서는 1인 시위는 시위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동시에 시위를 하는 경우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집회 시위로 본다

그렇다면 1인 시위는 무조건적으로 합법적인 시위가 되는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니다.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는 피고인 등 10인이 민주사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인 고용보장 등의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수회 걸쳐 미신고 옥외시위를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전에 서로 연락 없이 당일 다수인이 각각 1인 시위를 한 경우에도 피켓속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일에 공동의 목적이 형성됐다고 판단돼 집시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2014고정1653)이다.

요즘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트렌드인 만큼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1인 시위를 행하는 행위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종합해 다수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이므로 집시법이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2009도2821)이다.

나 잘못 이용했을 경우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1인 시위를 하는데 의문점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해당 경찰서에 문의한 후 법의 보장을 받으면서 시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무조건적인 보장이 아니고 준법정신을 지켰을 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위자는 준법정신을 지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재훈·장충경철서 정보경비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